

# 우리나라 지원예비군(志願豫備軍) 제도 발전방안 연구

강 용 구\*

국방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민간자산의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활용 여부는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면한 병역자원 감소와 예비군자원 급감 등 후방지역작전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과 전문자격을 보유한 민간인력 또는 단체와 여성을 지원예비군부대로 편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즉 지원예비군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해 국내·외 민간분야의 군사적 활용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발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첫째, 지원예비군 편성 개념 재설정, 둘째, 위기유형별 지원예비군 운용개념과 지역방위작전 간 활용 가능한 민간 전문자격과 조직 판단, 셋째, 지원자 확대 및 유인 대책 강구, 넷째, 지원예비군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예비군은 유사시 초동조치, 감시정찰, 예비군 작전지속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전시에는 예비군지역대 또는 예비군중대에 편성되어 지역방위작전의 핵심전력으로 활용한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시 현장 확인, 이재민 구조와 구호, 복구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비군의 모습을 정립하도록 한다.

주요어 : 지원예비군, 특전예비군부대, 여성예비군부대, 민간 전문자격·조직, 지원자 확대·유인

---

\* 주저자: 강용구/국방대학교 책임연구원/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Tel: 041-831-6482/E-mail: kang8800468@naver.com

## I. 서론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 총력전 형태로 치러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고 국가의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전쟁 지속능력을 확충했으며, 결국은 전쟁 지속능력의 확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18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에게 대한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자원입대를 신청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화력발전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우크라이나 50대 여성이 드론 조종사로 자원입대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조선일보, 2023. 11. 22). 또한,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도 병역의무 면제 대상인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Haredi) 남자인 2천여 명이 자원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2023. 11. 3).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어려울 때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사회 전반에 연대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외적의 침략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면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인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국난극복에 앞장섰다.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는 관군이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하지 못하는 사이 전국에서 향촌 단위로 의병이 일어나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바 있다. 이처럼 정규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자원하여 참전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우리 군은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의 영향으

로 병역 가용자원과 예비군자원이 감소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의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여기에 예비군 자원마저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용 병역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이미 특전·여성예비군 부대를 창설하여 의욕적으로 지원예비군 제도<sup>1)</sup>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 저변에 활용 가능한 민간자산과 전문인력을 지원예비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간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지원예비군부대로 확대 편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문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인력과 자산을 지원예비군으로 편성하여 후방지역의 군사·비군사 위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예비군 편성확대, 유인 대책, 교육훈련 등 지원예비군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원예비군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본 논문은 국내·외 민간분야의 군사적 활용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지원예비군 제도의 발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 II.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검토

### 1. 지원예비군 편성 법령 근거

지원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법령은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예비군 대원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예비군

1) 지원예비군은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하며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 특전예비군, 여성예비군으로 구분한다(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2023).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여성예비군 편성)와 제19조(특전예비군 편성)를 두어 지원예비군부대의 편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원예비군 편성 법령 근거

구분	내용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1. 특전예비군지역대 :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3. 타격대 : 동·읍·면 단위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편성원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18조(여성예비군 편성) ① 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군·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 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한다. 제19조(특전예비군 편성) ① 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 「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 2. 여성·특전예비군부대 창설 경과 및 편성 현황

### 1) 여성예비군부대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던 1989년 대한민국 최북단 백령도에 최초로 여자예비군소대가 창설되었다. 백령도 여성예비군은 창설 당시 지역 내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훈련을 격려하고 식사 봉사를 해왔던 진촌리 지역부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단순히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내 고장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출발했다. 초기 대원은 25명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예비군은 각종 교육에 참석해 실전 감각을 익혔으며 화생방부터 응급조치, 실거리 사격 등 정규 예비군 못지않은 훈련을 받았다. 이후 1991년 대청도 여성예비군소대(11명), 1996년 창원시 반림동 여성예비군소대(20명), 2004년 춘천시 남산면 여성예비군소대(65명) 등 지역별로 간헐적으로 창설되어 명맥을 유지했다(국방부, 2018).

2000년대 들어 수임군부대<sup>2)</sup>별로 여성예비군부대 창설이 본격화되어 2005년 양양읍대 등 18개 부대, 2006년 여주읍대 등 47개 부대 등이 집중적으로 창설되었다. 2017년에는 전국에 207개 소대 9,40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9월 현재 173개 소대 4,720명이 편성되어 있다. 여성예비군부대의 연도별 편성 현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여성예비군부대 소대 본부는 소대장과 부소대장, 전령과 보급병으로 편성한다. 부대는 의료구조분대, 급식지원분대, 기동홍보분대로 편성하고 각 분대원은 10명 이내로 편성하며 통제의 용이성과 임무수행을 고려해 개인별 활동 단체 및 마을 단위로 편성한다(국방부, 2023. 1. 10).



[그림 1] 연도별 여성예비군 편성 현황

### 2) 특전예비군부대

특전예비군은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부대가 수행하는 비정규전에 효율적인 향토방위 대응 전력으로 활용하고자 국방부의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지침 :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및 운영계획(2011. 4. 7)’에 근거하여 2011년 특전전우회가 주축이 되어 7개 중대 94명 규모로 최초 창설되었고, 다음 해인 2012년까지 92개 부대 1,39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최대 규모인 102개 부대 1,527명까지 확대된 이후 최근 급격히 그 규모가 감소해 2023년 9월 현재 68개 부대 630명만 남아 있다. 특전예비군부대의 연도별 편성 현황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도별 특전예비군 편성 현황

2) 수임군부대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하며, 그 부대의 장은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2761호(2023. 1. 10) 제2조(정의)

특전예비군은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대를 편성하고 시·군·구 단위로 중대를 편성한다. 특전예비군지역대는 지휘부에 지역대장과 부지역대장, 지원반과 통신반으로 편성한다. 특전예비군중대는 본부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두고 특전반, 의무반, 통신반을 편성한다(국방부, 2023. 1. 10).

### 3. 선행연구 검토

국방 분야에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균용(2011)은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 민간자원의 활용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주장하며, 민간자원의 활용 효율성이 특히 높은 정비 및 보급, 수송, 교육훈련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백재욱·정희원(2017)은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일성(2022)은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국방 분야에 민간근로자를 운용함으로써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 분야에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방운영 또는 인력 및 물자동원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예비군 제도 면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작전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방위작전 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 III. 국내·외 사례 고찰

### 1.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시민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군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드론부대와 IT부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드론부대(아에로로즈비드카, Aerorozvidka)는 2014년 돈바스 전쟁 이후 IT 분야의 대학교수와 학생, 취미로 전자기기를 다루는 민간 드론 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는데(Global-Biz, 2022),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지상부대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접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선견(先見) 능력은 향상되었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공중 영역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IT부대는 정부 주도로 민간의 IT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2022년 2월 창설되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격퇴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네트워크와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DDoS 공격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사이버 영역에서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종일, 2022).

이외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인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 상공에서 러시아의 전폭기 Su-34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MANPAD)인 이글라-1에 맞아 격추된 사건이 국내·외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러시아의 최신 전폭기를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떨어뜨린 세르히 치지코브는 예비역 대위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방위군(TDF)<sup>3)</sup> 소속으로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 우정국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국민이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와 2

3) 영토방위군(TDF: Territorial Defense Forces)은 예비역으로 편성된 부대로 우크라이나군의 정식 군사 직제로 편성되어 있다. 2015년 돈바스 전쟁이 소강기로 접어들면서 영토방위군의 소집과 훈련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1년 말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지자 영토방위군 규모를 대폭 증강했다. 영토방위군은 지방마다 1개 연대, 수도 키이우에는 2개 여단을 편성하여 총 25개 향토여단 약 150만 명 규모이다(양승봉, 2022).

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서방의 지원도 있지만 영토방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우리나라 예비군부대 민간자산 활용

2021년 우리 군의 후방지역작전을 담당하는 제OO보병사단은 4세대 전장에서 효과적 지역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모터사이클을 활용한 ‘스텔스 바이크부대’를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행장, 탄약창, 방위산업체 등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이 위치한 지역예비군부대에 민간 모터사이클에 내비게이션, 드론, 간이 정보분석장비, 위성전화기, 심장계 세동기 등을 장착하여 운용함으로써 유사시 상황 발생 지역에 가장 신속하게 기동하여 적을 탐색하고 접촉을 유지하며 드론을 활용한 정찰과 추적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미군 특수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텔스 오토바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사시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고 비포장 혹은 좁은 산악지역에서도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여 작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2년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제OO보병사단은 OO구 예비군기동대에 밴형 승합차에 도심지에서 다목적 활용할 수 있도록 경보용 사이렌과 확장기, 작전용 드론 등을 장착하여 ‘현장지원협조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육성·지원예산<sup>4)</sup>을 활용해 밴 차량을 리스한 후 초동단계에 현장에 출동하여 적을 발견 및 추적하고 필요시 초동작전 수행과 환자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개조했다. 특히, 차량 내부에 정찰과 추적이 가능한 작전용 드론을 장착하여 현장 상황이 실시간 대대 지휘통제실로 전송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해당 부대에서는 내부적인 시험 운용을 거치고 있는데 효과가 검증될 경우 사단 책임지역 내 전 구청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원예비군 전력으로 직접 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지만, 2023년 6월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출범한 자발적 예비자원 단체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가 있다. 50~75세의 은퇴세대들로 구성된 시니어 아미는 국가 위기가 닥친다면 언제라도 최일선으로 달려갈 각오와 함께 현역군인 세대와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현업 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단체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50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안보위기 발생 시 동원 예비군으로 다시 복무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 반대는 31.9%였다. 동원예비군 복무 등록 운동에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1.4%,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2.4%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유사시 언제든지 전방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소정의 동원훈련도 자청한다



[그림 3] 현장지원협조팀 운용 체계도

4)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가장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예비군 지원’은 예비군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행정, 의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관할지역 내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국방부, 2021. 10. 25).

고 밝혔다(시니어아미, 2023). 실제로 지난 11월 9일 서울 서초구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시가지 전투와 사격 훈련, 안보교육을 체험한 바 있다.

#### IV. 현 지원예비군 제도 문제점 및 제도발전 필요성

##### 1. 제도 및 정책 측면

첫째, 지원예비군 편성 규모와 통제 관리에 대한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도 수임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의존할 뿐 어느 규모로 편성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지원예비군부대로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하다. III장의 사례와 같이 최근 일부 지역방위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자생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이들을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기존에 편성된 여성·특전예비군부대의 편성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이전까지는 특전예비군 등의 노령화 방지를 위해 편성 상한 연령인 63세에 도래한 사람을 편성에서 제외하였지만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신규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는 해체되고 일부 부대는 편성 인원이 감소한 채 부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II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지원예비군부대 편성은 여성과 특전사 출신 예비군으로 제한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최근 편성 인원의 감소와 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소홀 속에 그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 중에도 특전예비군의 감소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최근 6~7년 사이에 최대 편성 인원(2016년

1,527명)의 약 42%(639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매년 50~70여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월형, 2022).

국방부에서 지원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05호(2021. 12. 17.)에는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 63세 이하(최종 복무한도) 임무수행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하였으나, 제2761호(2023. 1. 10.)부터는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정하여 63세 상한 연령을 삭제한 것은 지원예비군 인원 급감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된다.

셋째,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와 복지혜택이 미흡하다. 「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의 근거에 따라 지원예비군 간부는 연 13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작계 훈련 시 간부와 대원은 급식비 7천 원을 받는다. 입영훈련에 참여할 경우 31,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 미국의 경우 지원하여 편성된 예비군은 기간 중 현역에 준한 복지와 사기 양양 대책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지원예비군에게는 이러한 복지혜택이나 사기진작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애국심과 충성심에만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는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훈련보상비를 지급하는 현실을 풍자한 ‘애국 페이, 열정 페이’와 동일한 형태라 볼 수 있다.

##### 2. 조직관리 측면

첫째, 지역예비군부대의 정체성 확립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예비군부대 창설 당시 전시 지역방위작전뿐 아니라 평시 지역 활동에도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예비군부대를 편성하고 장비를 구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없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지고 예산투자도 되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 지역 언론에 여성예비

군이 지역 안보에 기여하기 보다는 일회성 홍보 활동에 치우쳐 주목적인 안보태세 확립에는 의문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기사가 보도된 사례가 있다(울산매일, 2023. 11. 16).

실제로 OO여성예비군부대는 2023년 7월 창설 이후 13건의 활동 가운데 사상자 인명구조 지원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건은 간담회, 지역예비군 격려 방문, 체육대회 입장 퍼레이드 참여, 상생 장터 참여 등 행사성·홍보성 활동으로 나타났다. 2024년 운영계획 역시 지역안보 계도 활동보다는 일회성 방문, 봉사성 활동이 다수여서 여성예비군 창설 목적에 맞는 활동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예비군에 대한 전·평시 임무가 모호하고 평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지원예비군은 지역별로 지원자를 개인별로 모집하여 편성하다 보니 국방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편성 인원 준수가 어렵고 장비와 물자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이제는 한계에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교육훈련 측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명시된 지원예비군에 관한 훈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원예비군은 작계훈련 6시간을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부대창설 시 창설교육과 작계훈련 시 작전지속지원 활동, 재난 시 구호 활동,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시간 등은 해당 연도 훈련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전예비군부대는 작계훈련에 추가하여 수임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아 지역별 가장 가까운 특전 여단에 입영하여 1박 2일(16시간) 동안 안보교육,

특공무술, 개인화기사격, 체력단련, 헬기 레펠, 주특기 등을 훈련한다.

그러나 지원예비군의 임무와 훈련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훈련과제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전예비군 입영훈련의 경우 가용 시간이 부족하여 명시된 과제 훈련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을 위한 과제로만 편성되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나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상황에 대한 훈련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년의 경우 입영훈련은 부대별로 입소율이 최고 100%에서 최저 41%까지 차이가 과다하고 평균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원근, 2022). 이는 생업 활동으로 인한 입영훈련에 대한 부담감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훈련 성과 달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전투력 발휘에 대한 자신감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 4. 지원예비군 제도발전 필요성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예비군 제도는 병역자원 감소, 예비군자원 급감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미래전 양상과 후방지역 작전환경 변화, 북한군의 특수작전부대의 능력과 위협에 따른 지역예비군부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구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을 보강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지역예비군부대에 필요한 능력을 모듈화하여 편성하고, 이들 모듈을 작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준화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의미한다.<sup>5)</sup>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 예비군자원의 부족과 지역별 작전환경에 따라 소요되는 예비군이 차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요소를 전력지원체계

5) 모듈화 부대는 단일의 독립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단위가 되는 부대를 의미한다(강용구·이환철·정진섭, 2022).



에 반영하여 확보하기에는 예산이나 가용 시간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통합방위작전요소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이다.<sup>6)</sup>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민방위 등 통합방위작전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비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지역 방위부대에서 직접 운용하기가 어렵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장기간 지속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셋째는 민간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역별로 특성에 부합된 다양한 민간자원을 조직화하여 후방 지역작전에 활용한다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기술이 군의 기술을 선도하는 현시점에서 이들 자산을 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다면 평시 편성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유사시에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참조하여 지원예비군 제도발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군 구조 개편으로 지역방위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져 행정구역 단위 분권화 작전이 불가피하다. 지역방위사단의 구조 개편과 부대 배치 조정으로 인해 과거 1개 대대가 1개 시·군을 담당하던 체계에서 최소 2~3개 시·군 이상을 담당하게 되면서 현역 군부대의 작전지역이 크게 넓어졌고 이로 인해 초기대응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병행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예비군중대를 시·군·구 단위 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하고 예비군 중대는 표준화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예비군부대를 모듈화하여 편성할 경우에도 소요되는 모든 작전요소를 편성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작전요소를 전력지원체계에 반영하여 전력화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분야 과학기술이 급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이 군사기술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안전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지역방위작전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드론과 모터사이클과 같은 장비는 각종 동호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유사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택배·배달 업체 등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물자의 수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단체와 환자호송 업체 등은 지역의 병·의원과 연계하여 군의 응급구조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전문인력과 조직을 지원예비군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분야의 군사적 목적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침공이 부당하다고 느낀 전 세계 시민이 총과 대포 대신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전쟁에 참여했다.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위성 인터넷 시스템인 스타링크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군대의 지휘통신망 체계를 지원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뜨린 악성코드를 잡아냈다(박종일, 2022). 이제는 민간 영역의 기술과 자산을 군사 영역으로 끌어들여 활용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장차 미래전 양상과 작전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민간인력 또는 단체를 지원예비군부대로 편성하여 현역 또는 예비군부대가 대응하기에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평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된 효과적인 후방지역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예비군부대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편성하는 등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6) 통합방위작전요소란 『통합방위법』에서 명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로서 군, 경찰(해경)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및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을 말한다(합동참모본부, 2019).

있다. 이를 통해 유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평시 재해·재난과 같은 지역 위기에도 동참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비군상 정립을 위해서도 지원예비군 제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V. 지원예비군 제도 종합적인 발전방안

### 1. 지원예비군 편성 개념 재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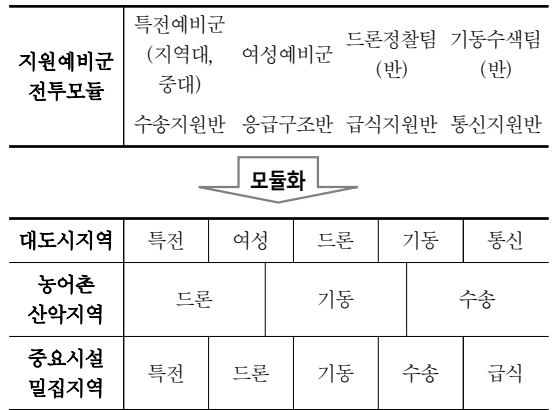
현재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부대로 편성되어 있는 지원예비군부대를 지역별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지원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 작전운용에 필요한 능력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예비군부대 편성 내에서 가용한 분야와 통합방위작전요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원예비군부대 편성 개념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예비군부대는 지역별 작전환경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의 책임하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편성한다. 편성 단위는 가용한 업체·협회·동호회 등을 모체로 전투모듈화하여 부대로 편성하고,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지역예비군 지휘관 책임하에 편성하여 특기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장차 예비군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지역대 예하부대 또는 중대 예하부대로 모듈 단위로 조합한 레고형 부대로 조직하여 작전상황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sup>7)</sup>

둘째, 지원예비군 모듈화 편성은 적의 위협 유형과 작전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예비군부대 모듈’을 전투수행 기능별로 편성하되 작전지역의 특성에 따른 적 위협을 고려하여 대도시 지역과

중요시설 밀집지역, 농어촌 및 산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전투모듈을 편조하여 예비군지역대 또는 예비군중대 예하에 조직한다. 이때 기능별 예비군부대 모듈은 가용자원과 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성해 놓고 적의 위협과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소요만큼 동원하여 운용하거나 잉여전력은 인접부대로 지원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적의 위협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예비군부대 편성 방안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대도시지역은 평시 도심지 기동순찰 활동과 상황 발생 시 기동화된 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을 가시화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모듈화 편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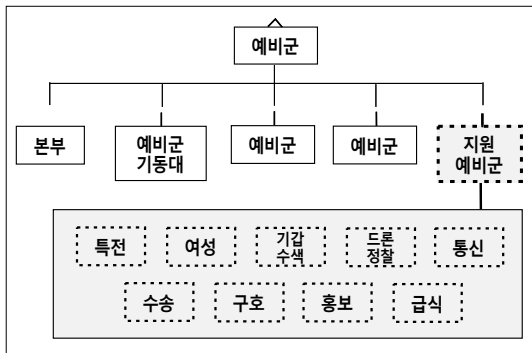
[그림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예비군부대 편성 방안

농어촌·산악지역은 모터사이클과 드론을 연계한 감시 및 정찰, 상황 발생 시 현장을 가시화하고 간이 정보분석조 임무와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모듈화 편성한다. 중요시설 밀집지역은 평시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 및 정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기동으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한다. 수송지원반은 적시임무수행부대의 출동을 지원하도록 모듈화 편성한다.

이와 같은 편성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예비군부대

7) 레고형 부대는 모듈화 부대들이 결합되어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강용구·이환철·정진섭, 2020)

는 예비군지역대 또는 예비군중대 예하에 편성하되 시·군·자치구 단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원예비군부대는 지역별 작전환경과 가용 민간자원 지원자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과 해체, 전환 운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편성한다. 지원예비군부대 편성을 포함한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조(안)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지원예비군을 포함한 예비군지역대 편성(안)

지원예비군부대는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 기업체를 모체로 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자격으로 지원한 사람은 개인별 특기와 능력을 고려해 편입을 결정하고 보직을 부

여한다. 전장 기능별·부대 유형별 지원예비군부대 편성 방안을 구체화하면 <표 2>와 같다.

## 2. 지원예비군 운용개념 설정 및 활용 가능한 민간 전문자격·조직 판단

지원예비군부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평시 임무와 활용영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기유형별 지원예비군의 운용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확실한 미래의 전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상비전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자원입대한 시민군뿐만 아니라 돈바스 전쟁에 참여했던 지역 민병대들도 영토방위군 예하로 편성하여 상비군에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의 지원예비군 역시 포괄적 안보 상황에서 위기유형별로 다양한 상황에 부합된 운용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평시, 국지전 및 대침투작전시, 전면전시 지원예비군의 역할과 운영개념을 설정하면 <표 3>과 같다.<sup>8)</sup>

<표 2> 전장 기능별·부대 유형별 편성 방안

구 분		편 성		세부 편성 방안
		인원	내용	
정보	드론정찰팀	/5	팀장, 드론병(2) 경계병(2)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 부대편성 · 열상장비, 주간 감시장비, 전송장치 부착
	사이버 지원반	/5	사이버요원(5)	· 통신·네트워크 보안업체를 모체로 부대편성 · 정보·산업보안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여 편성 · 지역 내 보안업체 지정, 통제 운영

8) 국지전(局地戰, Local War)은 전면전을 회피하면서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조건하에 국가정책과 군사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제한전쟁을 말한다. 대침투작전(對浸透作戰, Counter Infiltration Operations)은 평시 및 분쟁시 땅굴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침투하거나 침투하여 활동하는 적을 조기에 포착, 격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 작전을 말한다. 전면전(全面戰, General War)은 적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총력전 개념으로 실시하는 무제한적 전쟁을 말한다(합동참모본부, 2019).

구 분		편 성		세부 편성 방안
		인원	내용	
화력	드론공격팀	/7	팀장, 드론병(2) 탄약병(2), 경계병(2)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 부대편성 · 열상장비, 주간 감시장비, 전송장치 부착, 필요시 폭발물 장착이 가능하도록 기능 보완
	대전차공격팀	/7	팀장 대전차화기병(6)	· 지역별 서바이벌게임 동호회 등록회원 단위로 부대편성 · 적 전차 격멸(휴대용 대전차화기 지급)
기동	기동수색팀	/6	운전자(3) 드론병(1) 소총병(2)	· 작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모터사이클 또는 산악 바이크부대 편성 ·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협회 또는 동호회 단위 부대편성 · 임무수행 가능한 장비 휴대기준 정립(내비게이션, 정보분석장비, 응급구조킷, 드론 부착장치 등)
	특전예비군	1/12	팀장, 대원(12)	· 예비군지역대 :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 · 예비군중대 : 특별자치시·시·군·구 단위
작전 지속 지원	수송지원반	/10	반장, 운전병(9)	· 버스, 화물 운송업체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되 운전기사와 장비를 동시에 편성 · 지역 내 수송업체 지정, 통제 운영
	구호지원반	/5	반장, 구호병(4)	· 지역별로 등록된 응급구조업체에 소속된 인원과 장비로 편성(구급차, 응급구조장비,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등) · 지역 내 환자 수송업체 지정, 통제 운영
	홍보지원반	/5	반장, 홍보병(4)	· 멀티미디어 제작사, 영상편집업체를 모체로 편성하되 영상촬영 및 편집 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 · 지역 내 홍보업체 지정, 통제 운영
	여성예비군	1/30	소대장 분대장, 분대원	· 예비군지역대 직할부대로 편성(보급, 급식, 구호 등)

<표 3> 지원예비군 운용개념 설정

구 분	내 용
평시	·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반한 지원예비군 역할 확대 · 자연재해 예방·복구, 사회 재난극복 주도적 역할 ※ 지원예비군도 예비군의 일원으로 동참, 전문분야 활용
국지전 대침투 작전	· 적 색출 위한 정보감시 : 정찰 드론 등 · 공세적 차단·격멸작전 : 산악오토바이, 드론 등 · 예비군 작전지속지원 활동 지원 : 급식, 수송, 구급, 통신 등 ※ 지원예비군 능력 보유 자산 고려한 적극적 운용
전면전	· 국가총력전 개념에 의거 가용 지원자를 최대한 편성하여 적극 운용 ※ 지역내 가용 인력과 자산 최대한 지원예비군 편입

둘째, 현재의 지역예비군부대는 병과와 특기에 관계없이 연차별로 거주지 단위로 분대와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 주요 특기요원이나 전문가격을 갖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편성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예비군을 지역방위작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격이 무엇이고 이러한 자격을 어느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활용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격과 지역예비군부대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염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활용도가 높은 민간 전문자격 및 활용 분야

구 분	전문자격	활용 분야	
		지역예비군	비상근예비군
퇴역 군인 군무원 병	장교, 부사관· 주요 특기병· 군무원· 특전사 간부, 병· 퇴역 여군, 여성·	· 지역예비군간부	· 비상근예비군
		· 동원집행지원	· 특전예비군
		· 예비군지역대 참모	· 여성예비군
		· 비상근예비군	· 특전예비군
전문 면허	이륜자동차면허· 자동차운전면허· 무인멀티콥터조종·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재난안전지도사· 정보보안기사· 산업보안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멀티미디어제작·	· 기동수색대	· 수송지원반
		· 드론정찰팀	· 급식지원반
		· 공격드론팀	· 구호지원반
		· 수송지원반	· 홍보지원반
		· 사이버지원반	

이외에도 지역 내 각종 단체, 동호회, 협회, 기업체 등을 지원예비군부대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드론, 모터사이클, 산악바이크, 서바이벌게임 등이 있다. 기업체는 수송, 급식, 통신, 보안, 응급구조, 피해복구, 방제 등의 분야를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을 기능에 맞게 지원예비군부대로 조직하고 제대 규모에 부합하는 장비편제와 함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민간 전문인력과 조직을 지역예비군부대의 전장 기능별로 구분하여 선별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지역방위작전 간 활용 가능한 민간 전문자격 및 조직(예)

구 분	민간 고용자원		활용 가능 분야
	민간 인력	민간 조직	
지휘통제분야	퇴역 장교 부사관	정보통신업체 관계관	비상근 예비군 지휘관참모
작전 분야	정찰 감시 운용기술보유자 관계센터근무자	드론 등 동호회 방제업체 관계센터 등	정찰감시 첩보수집

구 분	민간 고용자원		활용 가능 분야	
	민간 인력	민간 조직		
작전 분야	모터 사이클	취미생활자 배달원	이륜자동차협회 동호회, 배달업체	기동수색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가	사이버업체 보안업체	보안 대사이버전
작전 지속 지원 분야	급식	해당 업체 종사자	도시락업체 식당	급식지원
	수송	운전사	수송업체 일반차량	수송지원
	구급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업체	환자구호
	피해 복구	중장비기술자	복구장비 보유업체	피해복구

### 3. 지원자 확대 및 유인 대책 강구

#### 1) 지원예비군과 유사한 성격인 의용소방대·자 율방범대의 처우 및 복지 사례 준용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지원예비군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통해 설치된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이며 소방대장과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두고 화재 발생 등 필요시에만 소집되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한다.

의용소방대의 운영 예산과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대원은 시장과 도지사로부터 출동 수당을 받으며 임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주기적으로 소방서나 소방학교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소방 통신시설과 소방용 차량, 화재진압장비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다. 현재 전국 단위로 총 3,921개 의용소방대에 약 96,0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2023).

의용소방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첫째, 법률과 시행규칙,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집수당을 받고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에는 여비와 급식비를 받는다. 이외에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과 각종 경비를 받는다.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서울특별시, 2022. 10. 17).

<표 6>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각종 보상 및 수당

구분	비용의 지원
소집수당	· 대원이 소집되어 임무수행하는 때에 지급 · 기준금액 : 소방위 시간외수당 단가 적용 ※ 2023년 기준 : 시간당 12,610원
교육훈련 여비/급식비	· 여비 : 4시간 이내 1만 원, 4시간 초과 2만 원 · 급식비 : 1일 7,000원(야간근무 시 포함)
자녀 장학금	· 대상 : 자녀 중 1명, 재학 중 1회 · 고등학생 : 자녀 학비보조수당 전액 · 대학생 : 고등학교 지급금액의 150% (2023년 기준 연 280만 원)
경비의 부담	·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 소방기술경연대회 소요경비, 홍보비 등 ※ 매년 지자체 예산 편성 시 반영
재해보상	· 요양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약 1.47억 원) · 장례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약 736만 원) · 유족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약 2.94억 원) · 장애보상 :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유족보상금 일정 비율 지급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여 전국 및 시·도, 시·군·구 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 근무자를 선발 국내·외 견학 기회를 제공하며, 전국 단위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체육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는 법률과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일관성 있게 사기, 처우 및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세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 봉사단체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다. 전국에 4천여 개 조직 9만여 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율방범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운영되어 오다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별도의 재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①법령 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추진, ②자율방범대의 날 공식 제정 추진, ③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가 없도록 복제, 차량, 장비, 활동비 등 최소경비는 2024년부터 경찰청 예산 반영 추진, ④시·도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원봉사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 지속 확대 추진, ⑤자율방범대법 재해보상 규정 신설 추진, ⑥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이 있다(경찰청, 2023).

## 2) 지원예비군 지원자 확보를 위한 유인 대책

지원예비군 편성확대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는 지원예비군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및 복지대책과 지원예비군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자긍심 고취 활동,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원예비군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비와 지휘관수당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입영훈련비는 생업을 뒤로하고 1박 2일간 입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 작계훈련 중식비는 의용소방대의 훈련비 기준 정도로 상향하여 여비와 중식비 지급 등 전반적으로 실비 수준의 경비를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지원예비군 보상비 및 훈련비 현실화 방안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지휘관수당	· 연 13만 원	· 분기 1회, 각 10만 원	부대소집 교육(4회)
훈련비	· 입영훈련(16H) : 31,500원	· 입영훈련(16H) : 154,000원	최저임금 적용
	· 작계훈련 중식비 : 7,000원	· 중식비 : 1만원 · 여비 : 1만원	의용소방대 기준
경비 지급	· 지원예비군 개인, 업체, 단체 보유 장비 사용에 따른 실비 지급		실비적용

지휘관수당과 훈련비 현실화와 함께 예비군 피복 지급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원 후 선발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예비군복을 지급하고 있으나 초도보급에 그치고 있다. 이를 최소 5년 단위로 군 예산을 반영하여 피복구매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예비군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복무기간 중 군 복지시설 이용자격을 현역에 준하여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복지대책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방예산에 반영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육성지원예산을 활용할 사항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국방예산에는 대표적으로 지휘관

수당과 교육훈련 여비와 급식비를 반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예비군대원 피복비와 주기적인 교체비, 지원예비군 재해휴업보상비, 사망보상금, 장례지원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육성지원 예산으로는 지원예비군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과 운영 유지비, 지원예비군 장비 사용에 따른 실비지원, 홍보 활동비, 이외에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원예비군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자긍심 고취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예비군에 지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혜택보다 국가와 군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군을 위해 자발적인 의지로 지원한 사람에게 예우를 다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군이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염출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지원예비군 자긍심 고취 방안

구분	주요 활동
지원예비군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홍보	· 지원예비군 유형별 브랜드 이미지(BI) 개발 및 홍보 · 부대기 제작, 예비군 마크 개선 ※ 예비군 부정적 시각 개선, 자긍심 고취
군과 지원예비군 소통 강화	· Veteran Warriors 100(가칭) 선발대회 · 예비군훈련장 개방 확대 ※ 예비군 존재감 부각, 자부심 고취
국민과 함께 하는 예비군 주간 지정, 홍보	· Thank You Veteran Day 지정, 혜택 제공 · 부대별 지원예비군과 가족 초청행사 · 유공자 포상시 지원예비군 포상 확대

셋째, 지원예비군 관련 법령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반영이다. 지원예비군 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구체적으

로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예비군 설치 및 지원사항을 반영한다. 지원예비군부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법이 없으나 현행 「예비군법」과 「예비군법 시행령」에 규정된 실비 변상과 재해 등의 보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비군에 대한 실비 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운영비와 부대장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의 지급 범위를 지원예비군부대 및 지휘관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의 육성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지원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관련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4. 지원예비군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 개선

특전예비군 입영훈련(1박 2일, 16시간) 간 실제로 가용한 훈련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인도인접 시간을 단축(4시간 → 2시간)하고 특전인의 밤 행사(2시간)와 역사관 관람(1시간) 과목을 폐지하여 훈련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한된 입영훈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비군사 분야 과제까지 훈련하고, 필요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활용하여 최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원예비군 편성 상한 연령(63세) 폐지에 따라 노령계층에 대한 훈련과제 선별과 훈련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 임무에 맞는 훈련장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개인화기(M16A1)와 M203 유탄발사기 등 구형장비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저격용 소총, 드론, 대전차 로켓 등 임무에 맞는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특전예비군 지역대에 편성된 산악·수중 구조중대는 최소한 소방방재청 구조반에 편성된 장비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민간자산의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활용 여부는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병역자원 감소와 예비군자원 급감 등 작전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과 여성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즉 지원예비군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문자격을 보유한 민간인력 또는 단체를 지원예비군부대로 편성하여 대도시지역과 농어촌 및 산악지역, 중요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된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지원예비군부대를 확대 편성하는 등 시행 가능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 우리나라의 지원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 및 정책 측면, 조직관리 측면, 교육훈련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도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으로 첫째, 지원예비군 편성 개념을 재설정하고, 둘째, 위기유형별 지원예비군 운용개념과 지역방위작전 간 활용 가능한 민간 전문자격 및 조직을 판단하였다. 셋째, 이를 토대로 지원자 확대 및 유인 대책과 넷째, 교육훈련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원예비군 제도를 주제로 다룬 연구가 드문 학계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과 시행 가능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미래 예비전력 부대구조 발전과 연계한 지원예비군부대 편성과 역할, 군사·비군사 분야 훈련소요와 효과적인 훈련 방법, 지원예비군 편성확대와 유인을 위한 세부적인 법령개정 소요 도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원예비군



제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발전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쓰이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용구, 이환철, 정진섭 (2022). 미래 육군의 예비 전력 부대구조 개편방안 연구. 한국군사, 11, 193-194.

경찰청 (2023). <https://www.police.go.kr>.

구원근 (2022). 특전예비군 내실화 방안.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발표 논문집. 2022. 9. 26. 41-42.

국방부 (2011).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지침 :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및 운영계획. 2011. 4. 7.

국방부 (2018). 예비군 50년사. 서울: 국방부.

국방부 (2021).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2021. 10. 25.

국방부 (2023).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2023. 1. 10.

김현경 (2015). 한국여성의 국방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균용 (2011). 국방분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군사학연구, 9, 328-334.

박종일 (2022). 사이버전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국방혁신, 서울: 로얄컴퍼니.

백재욱, 정희원 (2017). 국방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향. 국방정책연구, 33(3), 161-166.

시니어아미 (2023). <https://www.seniorarmy.or.kr>.

양승봉 (2022). 예비전력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사점. 2022년 學·軍·研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 논문집. 2022. 5. 19. 6-7.

울산매일 (2023). 지역 최초 '여성예비군' 실상, 일

회성 홍보 활동 다수. 2023년 11월 16일자.

윤원식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 강화와 언론의 역할 재인식. 2022년 學·軍·研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 논문집. 2022. 5. 19.

이월형 (2022). 특전예비군의 제도, 정책의 발전방안.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발표 논문집. 2022. 9. 26. 19-20.

임영재 (2017). 미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방민간인력 활용 발전방안 제언. 주간국방논단, 166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2023). [https://www.volunteer fire.co.kr](https://www.volunteerfire.co.kr).

정원일 (2018). 민간군사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정일성 (2022). 국방민간인력의 전시 동원 및 평시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6(5), 246-250.

조선일보 (2023). 나이도 못 꺾은 애국심. 우크라이나 할머니 드론 조종사로 입대. 2023년 11월 22일자.

중앙일보 (2023). '군 면제' 이스라엘 초정통파 신자 하레디 2,000명 자원입대. 2023년 11월 3일자.

합동참모본부 (2019).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Global-Biz (2022). 러시아 탱크부대가 벌벌 떠는 우크라이나 '아에로로즈비드카'를 아시나요. 2022년 3월 31일자. <https://www.gnews.com/article/GlobalBiz>.

투고일자: 2023. 12. 16.  
심사일자: 2024. 1. 23.  
게재확정일자: 2024. 2. 1.

# Development of the Volunteer Reserve Forces System in Korea

Yonggu Ka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Korea's Volunteer Reserve Forces system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 effective use of private assets through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Israel-Hamas War have been shown to contribute to victory or defeat in wa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the rear area operations, such as a decreas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a sharp drop in reserve forces resources, Korea needs to develop a system that effectively utilizes the civilian workforce or organizations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uch as reservists who have completed military service and women, in volunteer reserve unit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discusses the concept of organizing volunteer reserve forces; second, determines the operation of volunteer reserve forces by crisis type, with consideration of priv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organizations that can be used between regions in defense operations; third, proposes measures to expand membership and attract applicants; and fourth,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volunteer reserve forces. In case of emergency, volunteer reserve forces should perform initial actions, conduct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nd provide continuous support for reserve forces operations.

*Keywords: Volunteer reserve forces, Special forces reserves, Female reservists, Privat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organization, Applicant expansion and attraction*